호남인맥 대해부

수도권 인맥에 밀려 뿌리 못내려

이대순씨 최영철씨 송언종씨 김태현씨 임상규씨 박종구씨

이공계 출신 전문관료 드물어 장·차관급 인사서 홀대
과기부는 불모지 수준…현 고위급 단 한명도 없어

〈13〉 정통부·과기부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는1948년 체신부로 발족했다가 1994년 정보통신산업을 국가발전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로 개편됐다.

정보통신부 장·차관의 출신 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 출신의 전문 관료 그룹이 초강세를 보였다. 제5공화국부터 문민정부까지 임명된 14명의 장관 가운데 호남 출신은 이대순, 최영철, 송언종(이상 전남), 강봉균(전북) 등 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출신이 6명(최광수, 김성진, 이자헌, 오 명, 이우재, 경상현)이 가장 많았다.

영남 출신은 3명(최순달, 이석채, 윤동윤)으로 집계됐으며 충청 출신이 1명(김기철)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호남 인맥 발탁이 눈에 띄지 않았다. 비권력기관으로서 전문성이 우선된 것 때문으로 풀이된다. 5명의 장관 가운데 수도권 출신이 4명(배순훈, 남궁석, 안병엽, 이상철)으로 나타났으며 부산 출신 1명(양승택)으로 나타났다.

차관의 인맥 구조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제5공화국부터 국민의 정부까지 기용된 12명의 차관 가운데 호남 출신은 신윤식, 김태현(이상 전남), 김동선(전북) 등 3명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등 수도권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참여정부 들어서 임명된 장관 3명은 경남 출신인 진대제씨와 충청 출신의 변재일씨, 그리고 현직인 서울 출신 노준형씨였다. 차관 4명의 출신 지역도 각기 서울 2명, 충청 2명으로 나타났다.

16명의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호남 출신은 4명. 광주·전남 출신은 양준철 미래정보전략본부장, 임차식 소프트웨어 진흥단장, 김재창 비상계획관 등이다.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는 지난 1967년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립됐으며 1998년 과학기술부로 승격됐다.

과학기술부도 여타 비 핵심 권력부처와 같이 특정 지역 출신의 독식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보통신부와 같이 수도권 출신의 전문 관료 그룹이 중용됐다는 평가다. 특이하게도 비 핵심 권력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제5공화국 이후 호남 출신 장관은 단 한명도 없었다.

호남 배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과기부내의 호남 인맥이 취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5공화국부터 국민의 정부까지 임명된 17명의 장관 가운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출신은 9명(김성진, 전학제, 이태섭, 이관, 정근모, 김진현, 구본영, 권숙일, 서정욱)으로 나타났다.

충청 출신 3명(김시중, 강창희, 김영환), 영남 출신 3명(이정오, 이상희, 김용진)으로 집계됐으며 이 밖에도 강원 출신 1명(채영복), 북한 출신 1명(박긍식)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기용된 17명의 차관에서도 광주·전남 출신은 없었다. 다만 전북 출신은 2명(김용한, 유희열)이 기용됐다. 수도권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 출신이 4명, 강원과 충청, 이북 출신이 각 1명씩 기용됐다.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4명의 차관 가운데서는 광주·전남 출신 최초로 임상규 현 국무조정실장이 기용됐다. 이밖에 전북 출신(최석식) 1명, 서울·경기 출신 2명이 차관으로 임명됐다.

참여정부 들어 신설된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이 기용된 바 있으며 현재는 박인천 금호그룹 창업자의 막내아들(5남)이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동생인 박종구(전남)씨가 맡고 있다.

한편, 과기부내의 호남 인맥, 특히 광주·전남 인맥은 불모지 그 자체다. 26명의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은 단 한명도 없다.

정부 관계자는 "별다른 지역 차별도 없는데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호남 인맥이 취약하다"며 "과거 이공계 출신의 호남 관료가 드문데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인맥의 강세를 보인 점도 이유라고는 하지만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EU 전방위 공격…韓 농산물 방어

한·EU FTA 오늘부터 브뤼셀서 2차 협상

한국과 유럽연합(EU)이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줄다리기를 시작한다.

한국과 EU는 16일부터 20일까지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FTA 제2차 협상을 개최, ▲ 상품 ▲ 서비스.투자 ▲ 규제이슈(지적재산권·경쟁정책·정부조달) ▲분쟁해결·지속가능발전(분쟁해결·환경·노동·총칙) 등 4개 분과 모두에 대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다.

협상에는 우리 측에서 김한수 수석대표를 비롯해 130여명이, EU 측에서는 가르시아 베르세로 수석대표(EU집행위 통상총국 동아시아국장) 등 50여명이 참여한다.

양측은 2차 협상을 앞두고 상품 양허(개방)안 서비스 양허 초안, 정부조달요구안을 교환해 모든 분야에 걸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양측이 2차 협상에서 양허안에 대한 상대방의 진의 등을 파악하는 탐색전을 펼친 뒤 전략을 마련, 3차 협상에서 주고 받기식 협상을 할 수도 있다.

상품에서는 양측 모두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가 관심 품목이다.

EU 측이 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시했다는 우리 측 전언을 감안할 때 EU가 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으로 7년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돼 우리 측은 이를 앞당기자는 요구를 할 전망이다.

또 EU 측의 경쟁력이 높은 기계류와 화학제품도 쟁점 분야가 될 전망이고 화장품, 핸드백 등 이른바 명품도 EU 측의 관심 품목이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농산물의 경우 EU는 한국에 대한 수출이 많은 위스키, 와인, 돼지고기, 닭고기, 치즈 등 유제품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는 쌀 및 쌀 관련 16개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하고 다른 민감 농산물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세 철폐 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의회, SOC 건설 촉구 결의안

최근 정부 부처 등에서 전남도내 주요 계획 도로와 철도에 대해 연기 또는 재검토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차질 없는 건설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국회와 각 정당, 관련 정부 부처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3일 제2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송대수)가 제안한 '차질없는 국가 기간 교통망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5월 한국교통연구원은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 공청회에서 목포~광양 및 광주~완도 고속도로, 보성~임성간 철도 등의 공기 연장과 수요 재검토를 주장했으나 이는 전남의 낙후도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아울러 광주~장흥 고속도로 및 서해철도(목포~군산) 건설과 서해안 고속도로는 진도까지, 전주~광양 고속도로는 여수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쌀 수출 무역협상 악재"
전남도 김병욱의원 '신중론' 제기

최근 정부가 허가한 쌀 수출이 향후 국제 무역협상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병욱(민주·해남2) 의원은 13일 열린 제2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쌀 수출이 향후 국가간 무역협상에서 쌀 수입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60여년 만에 쌀 수출을 허가한 최근 한 달여의 짧은 기간동안 많은 지역에서 쌀 수출이 이뤄지거나 준비 중"이라며 "하지만 이는 정부가 추진중인 EU와 중국, 일본 등과 협상에서 쌀 시장 개방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현장과 시각

F1, 도의회와 공조부터

정후식 정치부 차장

지난 13일 오전 11시, 제226회 정례회가 열린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사업'과 관련 이상면 전남도 정무부지사에게 상임위 출석 요구를 했다가 불응하자 '불신임 결의안' 발의를 추진해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홍이식(민주·화순2) 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상임위에 정무부지사가 출석하면 체면이 손상됩니까? 체면보다 주민의 알 권리, 도정발전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홍 위원장은 정무부지사의 상임위 불출석은 '의회 경시'이자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다.

홍 위원장은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중대사안'의 경우 부지사를 상임위에 출석시킬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의장의 결재를 받아 요구한 것"이라며 이를 집행부 길들이기니, 관행 무시, 의원 접대에 대한 불만 등으로 왜곡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F1 지원특별법' 제정과 부지 확보 지연에 따른 향후 대책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 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부지사는 '선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제관광문화위는 10일 이 부지사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키로 하고 이를 의장단에 요청했다.

사상 초유의 정무부지사 불신임 결의안 발의로 이어질뻔했던 이번 사태는 다행히 도의회 의장단의 중재로 이 부지사가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이 부지사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 출석에 불응한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의원들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는 물론 평상시에도 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들께 현안에 대해 적극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전남도의 최대 역점사업인 F1의 타당성이나 사업 추진주체를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불식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은 소위 위원장을 둘러싼 여야간 자리다툼이 주 원인이었지만, 전남도의 정치력 부재도 한 몫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나종석(무소속·나주2) 의원은 "호주와 독일, 말레이시아 등 각 국에서 F1경기장 운영에 따른 재정 적자가 심각하고 문화관광부 조차 대회 유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특히 추진주체에 대한 특혜 의혹부터 해소시켜야 한다"고 보완을 요구했다. F1에 대한 도의회의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기적인 보고를 받는 상임위나 의원들조차 사업성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현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와 집행부간 공조체제가 필수적이다. F1사업이 어디서부터 어긋나고 있는지 전남도가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다.

/who@kwangju.co.kr